

“다 같이 망하는 광주형 일자리 반드시 막는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 반대 긴급 결의대회 ... “전국에 반값 임금, 저임금 일자리 늘어날 것”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시장 상황은 생각 않고 정치 논리로 밀어붙인 완성차 공장 증설이 광주광역시는 물론 자동차산업 전체에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금속노조가 1월 31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자동차산업 파괴, 노동권 부정, 문재인 정부 일방통행 규탄 금속노조 비상 결의대회’를 열었다. 대회에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기아자동차지부와 광주전남지부 확대간부 1천여 명이 참가했다.

같은 시각, 광주광역시청 안에서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이원희 현대차대표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켜보는 앞에서 광주사-현대차 완성차 공장 투자협약 조인식을 강행했다.

금속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자동차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한 사업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 전체의 공멸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내연기관 완성차 공장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금속노조는 친환경 자동차 전환을 고려해 빛그린 산단에서 친환경 전기·전자 부품 생산을 생산하길 제안했다”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한국 시장에서 경차 판매가 많지 않다. 5년 뒤 광주형 일자리 공장에서 만든 차가 팔리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와 현대차지부, 기아차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 국민에게 누가 더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지 판단을 구해보자”라며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성장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토론에 응하라”라고 촉구했다.

노조 현대차지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민을 속이는 사업이고 전국에서 반값 임금을 일자리 유치에 사용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부영 노조 현대차지부장은 “광주형 일자리 협약은 노조결성, 교섭, 파업의 권리를 5년간 봉쇄하는 반헌법, 반노동법 협약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원인무효다.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내용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허부영 지부장은 “현대차는 광주형 일자리에 투자하는 적은 돈으로 삼성동 본사 건축 승인, 수소차사업 국가지원 등을 얻어낼 계기로 삼고, 광주형 공장이 잘 돌아가지 않으면 손을 떼도 그만이다”라고 지적했다. 허부영 지부장은 “협약식 이후 완공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있다. 현대차지부는 계속해서 광주형 일자리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 반값 임금, 저임금 나쁜 일자리 확산을 막겠다”라고 선포했다.

강상호 노조 기아차지부장은 “삼성이 완

성차 사업에 뛰어들 뒤 기아, 쌍용, 대우차가 잇따라 무너지는 사태가 있었다. 세계의 완성사들은 몸집 줄이고, 해외공장 철수에 나서는데 한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라고 개탄했다.

강상호 지부장은 “문재인 정부는 앞선 실패 사례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현재 완성사 유희시설만 가동해도 충분히 자동차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상황이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막대한 재원만 낭비한 채 자동차산업 몰락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광주시민들이 모두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환영하는 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석 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언제부터 광주가 구결의 도시가 됐는지 모르겠다. 광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쪽 일자리 만들려 하고 있다”라며 “광주 노동자들은 정정당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라고 외쳐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 조합원들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투자협약식이 벌어지는 광주광역시청에 들어가 항의하려 했지만 경찰이 가로막았다.

노조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는 설 이후 사측에 ‘광주형 일자리 관련 특별고용안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한다. 이 자리에서 정부 정책으로 발생할 피해와 문제를 논의하고 원하청을 포함해 고용안정 방안을 요구할 예정이다. 두 지부는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거부하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